지하층 화재 매년 30여건…광주·전남도 안전지대 아니다

다량의 연기 발생에 대형 인명사고 우려…늘어나는 전기차도 위험 요소
광주시, 백화점·대형마트 등 안전점검…전기차 충전시설 관리 상태도

대전 아울렛 참사 8명 사망…지역 실태는

대전 현대 프리미엄아울렛 지하주차장에서 불이나 8명의 사망한 화재사고와 관련 광주·전남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지하주차장 화재의 경우 다량의 연기가 발생해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지하층 화재에 대한 안전대책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광주·전남 지하화재**=광주·전남에서도 지하시설에서 화재가 매년 30여건 씩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27일 광주시·전남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광주에서는 지난 2019년 20건, 2020년 10건, 2021년 21건, 2022년 13건의 지하층 화재가 발생했으며, 전남에서도 2019년 14건, 2020년 11건, 2021년 14건, 2022년 3건이 발생했다. 매년 광주·전남에서 20~30건의 지하층 화재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지하시설 화재는 자칫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지하에서 불이 나면 빠르게 대피하기가 힘들기 때문이다.대피로가 한정적이고 환기가 잘 되지 않아 화재로 인한 연기 피해에 특히 취약하다는 것이다.

대전 현대 아울렛에서도 화재가 발생한 지 20~30초만에 검은 연기가 덮쳐 지하 주차장을 순식간에 메워 버린 것으로 알려졌다.

화재 현장에서 환기가 잘 안 되면 공기가 부족해져 불완전연소(환기지배형 화재)가 일어나고 독성이 있는 일산화탄소가 생성된다. 또 열과 연기가 외부로 잘 배출되지 않고 실내에 쌓이는데다 피난 경로가 연기의 배연통로가 돼 피난·소화활동에 지장을 줄 우려도 크다.

창문 등 외부 빛을 받아들일 방법이 없다는 것도 문제다. 화재로 전력이 끊기면 빛이 완전히 사라지는 탓에 피난 방향을 찾기 어렵고, 복잡한 통로에서 방향감각을 잃기 쉽다.

김용철 호남대 소방행정학과 교수는 "지상층이라면 베란다나 창문 등 대피로가 있으나 지하층은 대개 일부 계단 통로 외 탈출로가 없어 대피가 훨씬 어렵다"며 "밀폐된 구조가 많은 만큼 화재 발생시 화염 및 연기의 거동, 피난 형태 등 측면에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건축물 관리자는 방화 셔터, 피난 유도등 등 안전장치를 잘 갖춰야 하며 이용자들도 피난 안내도를 통해 피난 경로를 잘 숙지해두는 등 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전기차 화재**= 대전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으로 구성된 합동감식반은 27일 대전 아울렛 화재 현장을 감식한 결과 지하 1층 주차장 하역장 인근에 주차된 1t 화물차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분석했다.

화재 초기에는 전기차 충전과정에서의 화재가 유력한 원인으로 꼽혔다. 대전 현대 아울렛 화재는 결국 전기차가 원인은 아니었지만, 전기차 화재도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특히 최근 광주·전남의 지하 주차장에 늘어난 전기차 및 전기차 충전소가 새로운 지하층 화재 위험요소로 꼽히므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광주에서는 최근 5년간 3건의 승용 전기차 화재가 발생했으며 전기버스 화재도 5건 이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6월에는 광주시 서구 치평동의 도로를 달리던 소형 전기차에서 불이 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4월 영암에서는 차고지에서 충전 중이던 전기화물차에서 불이 나 인접 건물로까지 옮겨 붙어 50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나기도 했다.

전기차 화재는 다른 차량 화재보다 진화 작업이 까다롭다고 알려져 있다.

전기차는 대개 리튬 이온 배터리를 사용하는데, 리튬은 물과 반응해 폭발하는 성질이 있는데다 감전 위험도 있어 물을 뿌려 불을 끌 수 없다. 대신 '질식 소화포'라는 방화 천으로 차량을 덮어 공기 유입을 차단해 불이 번지는 것을 막는 게 최선이다.

한편 광주시는 27~30일 대전 현대아울렛과 환경이 유사한 백화점, 대형마트 등 22곳에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시는 전기차 충전 시설 내·외부 상태 및 전기 충전 이상 여부 시험, 전기시설 유지관리 상태 점검, 소화·방화 구획 및 피난시설·대피로 유지관리 상태 등을 점검한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참사와 관련해 27일 오후 광주시 사회재난과와 경찰, 소방 관계자들이 광주 서구의 한 대형 마트 방재실에서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이제라도 발견돼서 다행…살아있는 학살 주동자들 처벌해야"

첫 신원 확인 5·18 행불자 염경선씨의 당숙 염규성씨

"이제라도 경선이 유해가 발견돼서 다행이야. 42년 세월 동안 경선이의 사망 경위조차 몰라 애만 태웠는데…."

27일 오후 3시께 화순군 이양면 조평마을에서 만난 염규성(81·사진)씨는 씁쓸한 마음에 계속 한숨을 내쉬었다. 규성씨는 최근 옛 광주교도소에서 발굴된 유해에서 5·18당시 행방불명자로 확인된 염경선씨의 당숙이다.

42년전 행방불명됐던 경선씨의 유골이 광주교도소에서 암매장된 채 발견됐다는 소식을 들은 규성씨는 "이제라도 발견되서 다행이다. 전두환은 죽었지만 아직 살아있는 학살 주동자가 많다"며 "사실관계를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해서 처벌해야 한다"며 분한 마음을 숨기지 못했다.

규성씨는 경선씨를 '화를 내지도 못하는 착한 심성을 가진 아이'로 기억하고 있었다. 규성씨는 "경선이는 8남매 중 장남이었는데, 가정형편이 좋지 않아 고등학교도 다니지 못한 채 일자리를 구하러 다녔다"고 회상했다.

1980년 4월 초파일에 할머니에게 인사를 드리고 일자리를 구하러 광주에 간 게 가족들이 기억하는 경선씨의 마지막 모습이다.

규성씨는 "경선이의 큰할아버지는 일흔이 넘는 나이에도 (경선씨를) 5·18행방불명자로 등록하기 위해 노력했고, 5·18 단체 활동도 했다"고 전했다.

그는 "경선이 할머니는 손주가 분명히 계엄군에게 안 좋은 일을 당했을 것이라고 생각은 했지만 생사를 정확하게 알지 못한 채 떠났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현재 서울에 거주 중인 경선씨의 친 여동생은 광주일보와의 통화에서 "그동안 오빠가 묫자리도 없고 비석만 덩그러니 있었던 게 마음에 걸렸었다"며 "이제 오빠 보러 광주 가야겠다"고 전했다.

한편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옛 광주교도소 부지에서 발견된 262구의 유골 중 1구가 DNA 검사 결과 5·18행방불명자였던 경선씨와 일치한다고 밝혔다.

/화순=민현기 기자 hyunki@kwangju.co.kr

5·18조사위 29일 회의…후속 조치 논의

행불자 신원 확인 따라 암매장 경위 파악 속도 붙을 듯

옛 광주교도소에 암매장된 5·18민주화운동 행방불명자 염경선(당시 23세)씨의 신원이 밝혀지면서 암매장 경위 파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5·18조사위)는 오는 29일 광주지검, 광주경찰청, 법무부, 광주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함께 회의를 거쳐 염씨에 대한 변사사건 처리 절차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염씨의 구체적인 사망 원인 등을 밝히기 위한 후속 조치, 사건 처리 절차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염씨의 유골은 지난 2019년 12월 발견된 후 '변사' 사건으로 처리돼 신원 파악 절차를 밟아 왔다. 통상 유골 등이 발견되면 변사사건으로 처리되지만, 해당 유골은 5·18관련성이 있다는 점에서 5·18조사위도 참여하게 됐다는 것이 관계자의 전언이다.

유골은 옛 광주교도소 무연고자 묘지에서 무더기로 발굴된 신원 미상의 유골 261구 가운데 섞여 있었다. 5·18진상조사위 등은 유골에서 유전자를 채취해 유가족 유전자와 대조 작업을 벌인 끝에 화순 출신 염씨라는 사실을 잠정 확인했다.

5·18조사위 관계자는 "법적인 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신원과 사인을 명확히 한 뒤 살해장소, 가매장 또는 암매장 장소 등 관련성을 입증하는 과제를 차근차근 풀어 가겠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64억 전세자금 대출사기

광주경찰, 117명 무더기 적발

비대면으로 손쉽게 대출 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가짜 전세 계약서를 만들어 수십억원대의 전세자금 대출사기를 벌인 일당과 가담자들 117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인터넷 전문은행에서 전세계약서와 신고필증만 제출하면 간편한 심사로 대출이 실행된다는 점을 악용했기 때문이다.

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임대인·임차인 역할을 할 허위 대출명의자를 모집해 불법 전세대출을 받은 혐의(사기 등)로 총책 김모(23)씨를 비롯해 117명을 입건하고 이 중 84명을 검거했다고 27일 밝혔다. 84명 중 총책과 브로커 7명은 모두 구속됐고, 모집책 9명, 집주인과 명의를 빌려준 가담자 등 68명은 불구속으로 조사중이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 말까지 청년 전세자금 명목으로 허위 대출을 신청, 총 64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직폭력배가 포함된 이들은 허위 명의 대여자들을 무더기로 모집했다. 전세조차 나가지 않은 허름한 집주인들을 임대인으로 모집했고, 임차인들은 돈이 필요한 20대를 중심으로 대출이 이뤄지면 대략 10%의 수익을 나눠주겠다는 수법으로 명의를 빌린 것으로 확인됐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사정상, 급매 합니다.

1. 대인동 156평, 롯데백화점 옆
   신안동 176평, 엄마요양병원 뒤
2. 상업지역, 오피스텔 허가 득
   타용도 변경가, 위치 좋음
3. 현재, 주차장으로 이용중
4. 매매 - 23억, 26억
5. 공동투자 하실분 모심

문의. 010-3605-5000

투자, 하실분, 덕남동 임야

- 임야 200평, 지분매매
- 도시지역, 자연녹지, 그린벨트
- 도로접함, 개발호재 많음
- 기획부동산 물건 아님
- 매매 - 4400만원(조정가)

문의. 010-3605-5000